

아세안 경제협력의 진화와 평가

박 번 순*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동남아 지역에 위치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은 대내적으로 주요국간의 갈등 조정, 대외적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67년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을 창설하였다. 이후 브루나이가 1980년대, 인도차이나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 1990년대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아세안은 총 10개국의 국가연합체로 성장하였다. 5개국이 처음 아세안을 창설할 때 주요 목적은 정치적 협력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와 함께 아세안은 역내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6년 발리에서 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발리협력선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아세안은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과 함께 고도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협력보다는 개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인한 글로벌화의 확산, 구사회주의권의 개방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아세안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bspark7867@gmail.com

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면서 역내외에 아세안이 하나의 블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아세안은 다시 한 번 역내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0년대 들어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 아세안+3 체제의 발전 등에 대응하여 독자성과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 2015까지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아세안은 아세안공동체의 한 지주로서 아세안경제공동체 창설을 경제협력의 목표로 삼고 있다.¹⁾

그동안 아세안의 경제협력과 통합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아세안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과 관련한 정책의 소개로서 주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양평섭 1994: 원용걸 1996: 유재원 1996: 권율 외 2003). 다른 하나는 AFTA의 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김완중은 ASEAN 역내경제협력이 역내교역에 어떤 효과를 창출하는가를 분석했으며(김완중 2009), 박인원은 AFTA가 아세안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석했다(박인원 1998). 이와 같이 아세안경제협력을 소개했거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더러 찾아볼 수 있으나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진전이나 그 내용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편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프로그램의 달성도를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ASEAN 2012). 이에 의하면 아세안은 2008~2011년 기간의 경제공동체 추진목표를 67.5% 달성했다.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1) 공동체(Community)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이지만 가장 흔히 거론되는 공동체는 유럽연합(EU)의 한 하부기구로 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라고 할 수 있다. EC는 1958년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마스트리트 조약 체결 이후 유럽의회의 권한 등에 맞추어 변경한 것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가장 중요한 지주 역할을 했으나 2009년 리스본 조약의 채택과 함께 공식적으로 소멸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공동체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것 같지는 않다.

조성을 위한 계획은 65.9%를 달성했고 경쟁력 높은 경제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67.9%를 달성했다고 점수를 주고 있다. 균형경제 발전과 세계경제와 통합에서는 각각 66.7%와 85.7%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어떤 근거로 달성도를 수치화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세안의 경제공동체 추진 계획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로 2030년에 아세안을 국경 없는 경제공동체로 구축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ADB 2012)²⁾. 2015년의 경제공동체와 2030년 국경 없는 경제공동체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세안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학자들이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세안은 상품, 서비스교역 그리고 자본자유화(FDI)에 부분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뿐인데, 이는 EEC가 상품, 서비스, 자본자유화, 노동이동, 경쟁법 통합, 관세동맹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재정통합만 이루지 못한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Hill & Menon 2011).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통합 정도가 아세안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NAFTA는 아세안과는 달리 상품교역에서 완전 통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보다는 더 진전되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아세안이 추진해 온 경제협력의 역사적 과정을 개관하고 아세안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공동체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세안은 2015년을 목표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공동체의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완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주장하는 경제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동안의 아세안 경제협력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세안 경제공동체 계획으로 진화되었는가를

2) 2012년 11월 현재 ADB는 본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Draft Highlight 만 제공하고 있다.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공동체의 주요 프로그램인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구축과 아세안의 균형 경제발전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논문의 제 II장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초기 노력으로서 아세안의 창립 이후 무역자유화 및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태동과 이의 진화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경제공동체 추진의 배경과 공동체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 III장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수준을 통계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아세안의 경제협력과 공동체 노력을 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 등 부문별로 분석 평가한다. IV장은 결론이다.

II. 아세안 경제협력의 진화

1. 산업 및 무역협력

초기 아세안은 정치협력체의 성격이 강했으나 1974년 베트남 통일과 공산화에 대한 우려로 역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67년 창설되어 10여 년간 정상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아세안은 1976년과 1977년에 연이어 제 1차, 제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정치협력에 그치지 않고 경제협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세안의 경제협력은 1976년 산업협력인 아세안공업프로젝트(Asean Industrial Projects: AIP)에서 시작되었다.³⁾ AIP는 필수상품

3) 아세안공업프로젝트(AIP)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으나 1976년 제 2차 아세안경제장관 회의(1976년 3월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산업협력을 위해 전문가그룹(Experts Group)을 조직해 아세안공업 플랜트(ASEAN industrial plants)로

에 대해 아세안 각국이 독자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회원국 5국 모두가 합작파트너로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를 갖는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회원국이 합의하여 특정 제품의 공장을 한 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하면 각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어 아세안은 1977년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하여 무역협력을 시작했는데 이는 쌍무적 혹은 일부 회원국 간 특혜관세 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우대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ASEAN 1977). AIP는 당초 계획한 5개의 프로젝트 중 2개만이 진척을 보았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었고, 이에 아세안은 곧 산업협력의 강화를 위해 1981년에 아세안공업보완계획(AICS)을 실시하였고, 1983년에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부품산업 개발을 위해 아세안공업합작(AIJV) 제도를 추진했다(ASEAN 1981 및 1983).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의 아세안의 무역과 산업협력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아세안의 초기 무역협력 프로그램이었던 PTA는 아세안의 품목 및 우대관세율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역에서의 효과는 미미했다. PTA의 대상 품목 수는 1980년대 말까지 대폭 증가했고, 관세율 우대도 최고 50% 인하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PTA 공여 품목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아세안 대부분 국가들의 PTA 이용률은 극히 낮았는데 예컨대 인도네시아를 보면 1989년 아세안에서 전체수입 품목 수 중 불과 1.2%만이 PTA에 의한 수입이었고 수출의 경우도 PTA 대상은 3.5%에 불과했다(Panagariya 1993). 가장 이용률이 높았던 태국도 PTA를 이용한 수입은 품목 수의 5.1%에 불과했다.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한 PTA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역

서 다음의 5개의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을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의 요소(urea)와 말레이시아의 요소(Urea), 필리핀의 과인산비료(super-phosphates), 싱가포르의 디젤엔진, 태국의 소다회(soda ash) 등이었다.

내수출비중은 1970년 21%에서 1988년 오히려 18%로 감소했고 그것도 중개역할을 하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1970년 6%에 불과했던 역내수출비중은 1988년 4%로 더 낮아졌다(DeRosa 1995: 34).

산업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도 미미했다. AIP는 5개국 전체가 참여하는 정부 주도의 협력을 통해 최종소비재 생산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실시한 AICS나 AIJV 등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큰 성과를 낳지는 못했다.

사실 1980년대 후반 들어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은 다소 줄어들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치가 상승하자 일본기업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투자를 확대했다. 이어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된 한국과 대만의 수출기업도 동남아로 투자를 시작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바탕으로 아세안은 수입대체공업화에서 수출주도형공업화로 정책을 전환했고, 그 결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4국은 동아시아 고도성장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World Bank 1993).⁴⁾ 즉 이 시기에 아세안 개별 회원국들은 역내협력 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인센티브 확대 등 역외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중국이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사태를 극복하였고, 베트남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전세계적으로 개혁 및 개방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경쟁이 가열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높아졌고, 유럽(EU)과 북미(NAFTA)의 지역통합도 가시화되었다. 외국

4) 세계은행은 동북아의 한국, 대만, 홍콩, 일본과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국(high-performing East Asian economies)으로 지칭하고 이들의 성장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인직접투자와 수출로 성장한 아세안은 양자 모두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1992년 개최된 제 4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2008년까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을 결정하였다(ASEAN 1992). 공산품을 대상으로 관세인하품목과 예외품목으로 구분한 후 관세인하품목에 대해 모든 국가가 강제적으로 참여하여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도입했고, AFTA를 촉진하기 위해 이 중 15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조기에 관세를 인하하도록 했다. 일반 관세인하품목에 대해서는 2007년 말까지 HS-6단위 상품 전체의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8년까지 AFTA를 완성한다는 목표는 소극적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아세안은 UR 협상 타결 이후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에 열린 제 5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AFTA 완성시기를 2008년에서 2003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등 수정 계획에 합의했다. 수정계획은 관세율이 20% 이상인 일반품목은 1998년까지 20% 이하로, 2003년까지 5% 이하로 인하하고, 관세율 20% 이하 제품은 2000년까지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15개 가속품목 중 20% 이상인 품목은 2000년까지, 20% 이하인 품목은 1998년까지 관세인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인하 예외품목 중 일시예외품목을 1996년부터 연간 20%씩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산물을 CEPT에 포함하는데, 즉시 관세인하대상 품목, 일시예외품목, 민감품목 등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즉시인하품목은 1996년 1월부터 편입하도록 했다.

아세안은 또한 산업 및 통상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과 역외국가들 간의 투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아세안공업협력(AICO) 제도를 추진했다(ASEAN 1996). 이전의 산업협력이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이었으나 성과가 낮았기 때문에 민간주도,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으로 방

<표 1> 아세안공업협력(AICO) 계획의 내용

법적근거	-아세안공업협력 기본협정(1996) 및 개정 프로토콜(2004)
목표 내용	-산업생산증대(최종재, 중간재, 원료까지 포괄) -아세안 역내 및 역외지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역내무역확대 -역내기업의 합작투자 장려
참가국	-최소 2국의 2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협력하는 형태 -아세안 지분 30%이상 -아세안 상공회의소(ASEAN-CCI)의 제안으로 시작
혜택	-생산제품의 역내 무역에서 AFTA의 최종 목표 관세율인 0-5%로 우대 -참여기업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 현지화(local content) 인정 -개별국 국가에 의한 비관세 우대

자료: ASEAN 1996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향을 전환한 것이다. AICO는 아세안 회원국 중 2개국만 참여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었고, 아세안의 지분도 최소 30%면 가능하도록 되었다. AICO는 역내 부품 생산과 이를 최종재로 조립하는 과정을 중시하여 생산 공유(production sharing)를 촉진하였는데 AICO의 우대혜택은 기존 산업협력 프로그램보다 크고 유연성도 증가하였으며 AICO 조치에 의해 승인된 제품은 역내 수출시 0~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돌아보면 1970년대 말에 시작된 경제협력이 1990년대 초반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인 AFTA와 AICO가 등장한 것이었다. 실제로 AFTA는 PTA 대신 모든 국가가 강제적으로 참여하여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도입했고,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당초 2008년 공산품 관세를 0~5%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아세안 선발 회원국은 2002년 말까지 농산품을 포함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것이다.⁵⁾ AICO

5) 그러나 아세안 각국은 자국의 입장에 따라 중요산업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

도 참여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2개국 참여만으로도 가능해졌고,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사업의 지분을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AFTA나 AICO의 성과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각국의 이해가 달린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특히 AICO의 경우 AFTA로 인해 일반 수출입상품의 관세가 5% 이하로 인하되자 5%만 부과하기로 한 AICO의 우대 관세정책은 의미가 없어졌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이 자동차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았고 아세안 후발 회원국이 참여할 기회 역시 없었다(ASEAN 2005).⁶⁾

2.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

한편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높은 투자율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한 아세안은 경상수지 악화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폭이 컸던 태국에서 1997년 8월 발생한 외환 위기는 곧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되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기반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거의 중단되었다. 불안정한 아세안을 피해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으로 투자를 전환하게 되었다. 아세안은 외국인직접투자-수출이라는 기존의 발전모델 대

인하를 유예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6) AICO를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은 아세안의 자동차 산업 생산네트워크 심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4월에 발표된 아세안의 자료를 분류해 보면 프로젝트는 자동차 115, 전기전자 7, 식품 5, 기타 2개 였고, 자동차 산업에서 혼다자동차가 40개, 토요타가 32개, 닛산 5개, 덴소 5개, 미쓰비시 3개 그리고 기타가 30개 였다. 따라서 AICO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대아세안 부품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신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⁷⁾

이 시기에 아세안이 직면한 또 하나의 도전은 회원국 간 개발격차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도차이나 4국(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CLMV)이 아세안에 가입했으나 이들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의 일괄적용은 불가능했다. 이들은 선발국과 같이 AFTA의 관세인하에 보조를 맞추기 어려웠다. 이들은 또한 경제적 제도에서도 베트남과 같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미얀마와 같이 군부독재 및 폐쇄경제를 유지함으로써 아세안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지역통합체로서 통일된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이러한 내외부의 환경변화로 아세안은 다시 한 번 경제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발발 직후인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 2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는 경제통합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비전 2020을 채택했다.⁸⁾ 다음해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 5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은 비전 2020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인 하노이행동계획(Action of Hanoi Plan)을 채택했다. 하노이행동계획은 1999~2004년 6년 기간의 실행 계획으로서 당시의 경제난을 반영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등을 필두로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협력하기로 한 것이었다. 싱가포르에서 2000년에 개최된 제 4차 아세안비공식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를 천명했는데 이는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기술 개발, 노동자 훈련에 초점을 맞춰 회원국이 가능한 한도에서 참

7) 태국 수상 탁신(Thaksin)은 중소기업개발, 농촌개발 등 기존의 수출주도형 대량생산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성장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소위 “탁시노믹스(Thaksinomics)”를 주창하기도 했다.

8) ASEAN Vision 2020은 경제통합을 형성하기 위해 역동적인 개발(Dynamic Development)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ASEAN Vision 2020은 후에 아세안공동체의 기초가 되었고, 아세안은 이후에 국제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춰 아세안 공동체 설립시기를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여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ASEAN 2000).⁹⁾

아세안은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9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협력선언Ⅱ(발리협력선언Ⅱ)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아세안 비전 2020”을 보다 구체화하여 2020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3개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아세안공동체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ASEAN 2003). 아세안이 중장기적 협력의 비전을 아세안공동체로 구체화하면서 2004년 비엔찬에서 개최된 10차 정상회의는 비엔찬행동계획(Vientiane Action Programme: VAP)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행할 분야별 전략과 세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우선 분야를 선정해 2010년까지 완전통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 12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아세안공동체 창설 완료 시기를 기존의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3차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구축, 경쟁력이 있는 경제지역, 역내 경제적 격차 해소, 세계 경제와 통합 등 4개 분야의 목표를 담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한 13차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헌장(ASEAN Charter)을 채택했는데 이로써 아세안은 법적, 제도적 존재의 근거를 갖춘 법인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 아세안은 국제 질서의 구축과정에서 아세안의 중심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2011년에는 발리협약 Ⅲ을 발표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단일 플랫폼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ASEAN 2011a). 이와 더불어 역내 경제격차를 해소하

9) 아세안 정상은 의장언론성명에서 아세안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중국, 일본, 한국의 IAI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한중일도 자금 협력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아세안의 독자적 역량에 한계가 있고 역내의 일본 및 중국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기 위해 균형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틀(The ASEAN Framework for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과 동아시아 경제질서 구축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조한 기본틀(ASEAN Framework for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채택했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를 창설한다고 했지만 공동체의 정의는 모호했다.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은 정의 대신 4개 분야를 발굴하여 이들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4개 분야는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구축, 경쟁력이 있는 경제지역으로 전환, 아세안 내 경제적 격차 해소, 세계경제와의 통합이며, 이 4개 분야는 다수의 협력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각각의 협력분야는 2015년을 목표로 하며 2008년~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2103년, 2014년~2015년 기간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는 역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된다. 아세안 선발 6개국의 경우 수입관세는 일부 민감 및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면 2010년까지 제거하고 CLMV 국가들의 경우 2015년까지 모든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게 된다. 비관세장벽의 경우 2012년까지 유예하게 되는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선발 5개국은 2010년에 철폐하고, CLMV국가는 2015년까지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2013년까지 운송 서비스업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2015년까지 여타 서비스 분야 자유화도 추진한다. 2015년까지는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완료할 것이다. 투자자유화, 자본시장 개발 및 통합을 강화하고 자본계정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숙련인력의 이동 역시 자유화한다.

“경쟁력이 높은 경제지역으로 전환”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4대 분야 중의 하나로서 아세안은 이를 위해 경쟁, 소비자 보호, 지적재

산권 보호 등을 강화한다.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2015년까지 경쟁정책의 도입에 노력하고 인프라 분야에서는 도로, 항공운수, 국가 간 수송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에서도 2015년까지 아세안에서 전자상거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인프라를 조화시키기로 했다. 경쟁력이 높은 경제지역이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입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외국인기업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세안은 중소기업을 개발하고,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개발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아세안 중소기업이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개발기금을 설립한다. 또한 IAI의 경제통합의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통합 정책과 관련된 정부 공무원의 역량개발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와의 통합에서는 아세안 중심의 대외경제관계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 FTA와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을 검토할 때는 아세안 역내 통합 계획을 고려하고 국제무대에서 아세안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세계 및 지역경제와의 통합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기술원조 패키지를 개발해 후발 국가들의 산업생산능력 및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한다.

나아가 아세안은 아세안공동체 달성을 위한 아세안의 연계성 제고와 역내 개발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2007년 11월 싱가포르의 제 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통합을 위해서는 개발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ASEAN 2007a).¹⁰⁾ 곧 이어 아세안 후발 회원국(CLMV)과의 격차 해소를 위

10) 의장성명서의 제 14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세안의 통합노력의 편익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발격차의 축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1차 작업계획(IAI Work Plan 2002~2008)이 종료되면서 아세안은 IAI Work Plan 2(2009~2015)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09년에는 아세안의 역내 연계성 제고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아세안의 중심성 강화에 기여하고 아세안공동체 구축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ASEAN 2009b) 물리적(인프라), 인적(관광객과 숙련노동자의 이동), 제도적(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연계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ASEAN 2011c).

<그림 1>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주요 내용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높은 경제지대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와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무역 자유화 • 서비스무역 자유화 • 투자 자유화 • 자본 자유화 • 숙련인력이동 자유화 • 우선분야(12개) 통합 • 농식품임업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정책 강화 • 소비자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 인프라 개발 • 조세 협력 • E-Commerce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개발 •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개발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경제관계 협력: 아세안 중심성 유지 •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참여

자료: ASEAN. 2009a 를 이용하여 필자가 정리

IV. 아세안 경제통합에 대한 평가

1. 경제통합에 대한 평가 의의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은 1970년대부터 경제통합을 위해 수많은 산업 및 무역협력 방안을 추진했다. 다음의 <그림 2>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2000년 이전의 협력은 주로 산업과 무역협력으

동의했다(We agreed that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remains an important task which will ensure that the benefits of ASEAN's integration efforts are fully real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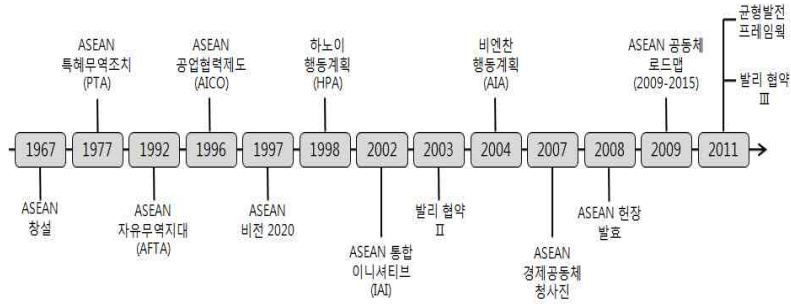
로 구분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AFTA와 AICO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단순한 협력에서 벗어나 비전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경제 분야의 비전은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되었다.

아세안의 협력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경제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정 정책이 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이 목표한 바와 같이 2015년이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세계경제에 얼굴을 내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청사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정성적으로나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청사진에서 4개 요소, 즉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이 높은 경제지대,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들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 균형경제발전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¹¹⁾ 또한 평가과정에서는 아세안의 현재 경제통합 단계를 EEC와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아세안은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11) 경제공동체 4개 분야 중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는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다. 경쟁정책, 지적소유권보호 등 몇 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과연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가 될 수 있는가 의문이다. 세계경제와의 통합은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한 채 대외협력을 하며 글로벌 공급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준이 모호하여 평가하기 어렵다.

12) 물론 아세안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모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7년 당시 아세안 사무총장은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세안에게 EU는 아이디어를 구하는 대상이지 모델은 아니라고 밝혔다(ASEAN 2007).

<그림 2> 아세안 협력의 진화 과정



자료: ADB, 2012: 22를 일부수정.

2. 경제공동체 분야별 평가

(1)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평가

아세안이 단일시장으로 전환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첫째 역내 무역비율을 검토해 본다.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율은 1993년까지는 20% 미만이었고 AFTA가 시행되었음에도 외환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8년 2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역내무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2003~2006년 기간에는 그 비율이 24%를 돌파했고 2007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5%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다시 24% 수준으로 하락했다.(<그림 3> 참조)

또한 역내무역비율이 1993년 이후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건전하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 들어 아세안 역내 수출에서 석유 등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6년~2000년 기간 21.3%에서 2006년~2010년 33.6%로 증가했고, 공산품 중에서 아세안의 대표적 수출상품인 전자 및 기계부문의 비중은 오히려 55.8%에서 42.3%로 하락했다.¹³⁾ 즉 아세안의 역내무역 비중의

13)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의 무역통계 DB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증가는 공산품 무역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이 기간 중에 세계적인 1차 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역내 자원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는 것이다. 사실 아세안의 최대 수출산업인 전자산업의 역내 수출비중이 2006~2010년 기간 하락한바가 있어 생산네트워크가 역내에서 확장과 심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전기 전자 산업의 역내 생산 공유가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아 역내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하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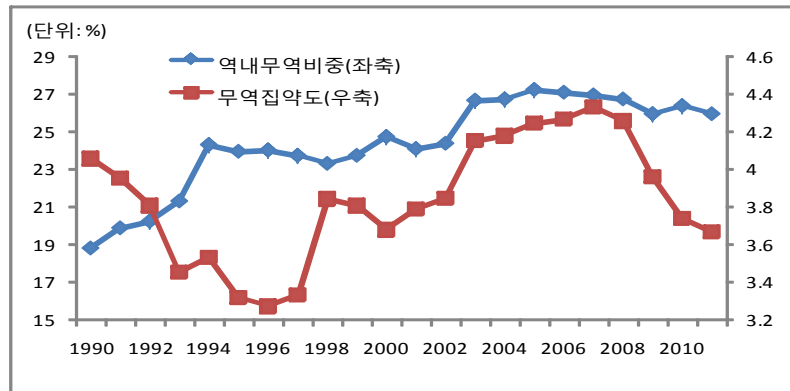
단일시장의 진전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이 상대적으로 아세안 역내에 어느 정도 무역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을 아세안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무역집약도(Intra-regional Trade Intensity)를 통해 아세안의 시장통합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다.¹⁴⁾ 아세안의 역내 무역집약도를 보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1996년 3.3을 최저점으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 4.3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3.7로 하락했다.

14) 무역집약도(Intra-regional Trade Intensity)는 특정지역에 대한 무역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eft(\frac{T_{ii}}{T_i} \right) = \frac{\text{역내수출입 비중}}{\left(\frac{T_i}{T_w} \right) \text{ 전 세계 수출입에서 해당 지역 비중}}$$

T_{ii} = 지역 i 의 역내 수출입, T_i = 지역 i 의 총 수출입, T_w = 전 세계 수출입

<그림 3> 아세안의 역내무역 비중 및 집약도 추이



자료: ADB ARIC DB에서 추출 작성

한편 단일생산기지에 대해서는 직접투자, 자본, 숙련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현재 미얀마는 증권거래소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경우도 아주 초보적 단계의 증권거래소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이동과 관련된 단일생산기지의 분석은 직접투자의 현황분석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접투자는 아세안 역내에서의 직접투자 유입과 역외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세안의 총 FDI 유입 중에서 역내의 FDI는 2000년 3.2%에서 2010년 16.1%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07년의 역내투자비율이 20.1%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역시 단일생산기지를 만들기 위한 아세안 역내 투자는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개별국가별로 보면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선발 회원국의 경우 역내 FDI 유입비중이 낮고 저개발국인 CLMV에 대한 역내 투자가 많은 편인데 캄보디아, 라오스 등 후발 회원국에 대해서는 자원개발, 서비스, 노동집약적 산업에 역내 FDI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표 2> 아세안 총 FDI 유입규모와 역내 비중

(단위: 백만달러, %)

	2000년	2003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FDI 유입액	23,541	24,512	56,647	75,650	47,076	38,266	76,208
역내 FDI 유입액	762	2,712	7,876	9,626	9,449	5,271	12,279
역내 FDI 비중	3.2	11.1	13.9	12.7	20.1	13.8	16.1

자료: ASEAN 2012b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 필자 작성

아세안 기업에 의한 아세안의 생산기지 육성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산업협력 프로그램이 AICO 등 다국적기업 투자 유치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바 있다. 실제로 역외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대아세안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 다국적기업의 투자도 내용면에서는 생산기지 육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아세안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대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린필드(green field)에서 M&A형,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전됐고,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2004년 40.6%에서 2010년 28.4%로 감소했으며 서비스 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투자를 상회했다(ASEAN 2011b). 2000년대 들어 아세안의 입지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면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해진 것이다.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아세안의 단일생산기지화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저임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국가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주로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되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기도 한다.

15)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선발 일부국가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2010년 기간에 아세안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615억 달러였으나 이중 싱가포르 594억 달러, 인도네시아 275억 달러, 베트남 252억 달러, 태국 198억 달러, 말레이시아 178억 달러로 전체의 92.7%를 차지했다. 정작으로 필요한 후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극히 미미하다(ASEAN 2011b table 25).

경제통합의 중요 요소인 노동이동의 경우 아세안은 숙련인력 (skilled labour)의 자유이동만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일반노동자의 이동은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의 공급지가 될 후발 아세안 보다는 수요자인 선발 아세안국가에 더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역내의 소득격차를 고려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이주 수요는 막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이주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진전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아세안은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숙련인력의 이동을 자유화한다면 후발국에서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결국 역내의 발전격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세안이 단일시장으로 경제를 통합한다는 목적은 역내 무역비율이나 집약도 모두 2008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이 새로운 무역을 아세안 역내에서 창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외지역에서 더 많이 창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내통합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아세안의 단일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일생산기지의 경우도 아세안 역내에서의 직접투자는 여전히 20%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점, 역내의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등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로 순조롭게 진전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노동력의 이동을 더욱 자유화하고 촉진하지 않는다면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겠다.

(2) 균형 경제발전

아세안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역내의 개발격차 해소가 필수적인 과제로서 아세안은 경제공동체의 중심 목표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의하면 아세안은 균형발전을 위해 두개의 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첫째는 중소기업의 개발이다. 중소기업의 개발은 다국적기업이 대량생산 조립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아세안에서 특히 중요하다. 아세안에서는 중소기업, 특히 자국기업인에 의한 중규모 기업의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발히 창업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 185개 중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사어환경 용이성이 상위 20위권 안에 들어 있을 뿐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창업환경은 극히 취약하다. 128위인 인도네시아나 138위인 필리핀 모두 사업착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신용접근도 용이하지 않으며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식부문의 공식화가 쉽지 않고 중소기업의 영세성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6)

<표 3> 아세안 주요국의 사업환경 용이성(2013)

	종합 순위	사업 착수	건설 허가	부동산 등기	신용 접근	계약 집행
말레이시아	12	54	96	33	1	33
태국	18	85	16	26	70	23
인도네시아	128	166	75	98	129	144
필리핀	138	161	100	122	129	111
한국	8	24	26	75	12	2

주: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용이성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설립을 상정해 평가하고 있다.

자료: World bank 2013.

16) 중소기업 개발이 개별국가의 균형성장에 이바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역내의 격차 해소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은 이미 지적한 IAI Work Plan 2(2009~2015)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세안경제공동체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실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균형성장을 하기 위해서 IAI 2를 추진하는데, IAI 2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발전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의미 없는 프로그램의 반복만을 제시해 놓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낳게 되고 역내 경제적 격차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통합으로 무역이 확대되거나 투자가 증가하면 국가 간 임금격차가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회원국의 1인당 소득은 수렴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먼저 시간경과에 따라 아세안의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세안의 1인당 소득추이를 보면 1997~2002년, 2002~2006, 2006~2010년 전체 기간에 걸쳐 모두 아세안 선발 회원국에 비해 후발 회원국에서 더 빨리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1인당 소득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7~2002년 기간에는 선발 아세안국가들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소득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후발 아세안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2~2006년 기간에는 후발 아세안의 성장세가 더 높아지긴 했지만, 선발 아세안의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그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2006-2010년 기간에는 라오스를 제외하면 후발 아세안의 소득증가속도가 완만해 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비록 후발국의 1인당 소득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격차가 조기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표 4> 아세안의 1인당 GDP(PPP, 명목달러)

(단위: 달러, %)

	1997	2002	2006	2010	1997-2002	2002-2006	2006-2010
브루나이	41,660	45,630	49,443	48,892	1.84	2.03	-0.28
캄보디아	725	1,065	1,705	2,194	7.99	12.48	6.51
인도네시아	2,508	2,550	3,341	4,325	0.33	6.99	6.67
라오스	1,020	1,343	1,859	2,573	5.66	8.47	8.47
말레이시아	8,653	9,515	12,386	14,731	1.92	6.81	4.43
미얀마	392	677	1,233	1,950	11.55	16.17	12.14
필리핀	2,271	2,541	3,255	3,969	2.27	6.39	5.08
싱가포르	30,035	34,800	49,359	57,936	2.99	9.13	4.09
태국	4,911	5,323	7,181	8,554	1.62	7.77	4.47
베트남	1,190	1,644	2,389	3,205	6.68	9.79	7.62

자료: World Bank DB

또 다른 지표를 통해 소득격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시점에서 역내 국가 간의 소득배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Giovanni et al. 2009).¹⁷⁾ 아세안 내의 최고소득국가와 최저소득국가의 소득비율(GAP I)은 2002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최고소득국가의 소득과 해당 경제권 평균소득의 비율(GAP II)은 더 확대되었다(박변순, 김정훈 2012). 상위 3개국 소득평균과 하위 3개 소득평균의 비율(GAP III)은 CLMV의 아세안 가입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최근에도 1992년 수준 보다는 악화되고 있다. 경제권 내 상위 3개국

17) 각 지표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따랐다. GAP I은 경제권 내(아세안)의 최고소득국가와 최저소득국가의 소득비율, GAP II는 최고소득국가의 소득과 해당 경제권 평균소득의 비율, GAP III는 경제권 내 상위 3개국 소득평균과 하위 3개 소득평균의 비율, GAP IV는 경제권 내 상위 3개국 소득평균과 해당 경제권 평균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평균과 해당 경제권 평균소득의 비율(GAP IV) 역시 1997년 이후 악화되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이다.¹⁸⁾ 즉 아세안의 역내 소득 격차는 절대적으로 크고 시간경과에 따라 격차 해소에도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들어 소득격차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1990년대 초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소득 격차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개발국인 CLMV국가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아세안의 소득격차를 EU 15개국의 소득격차와 비교해 보면 아세안의 소득격차의 실상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다. 4개 지표 모두 아세안의 격차가 EU에 비해 더 크지만 특히 아세안과 EU 15의 최저소득국에 대한 최고소득국의 소득배율(GAP I)과 상위 소득 3국의 하위 소득 3국에 대한 소득배율(GAP III) 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과 EU의 소득 격차의 차이는 아세안의 저개발국인 CLMV 국가의 낮은 소득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CLMV국가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성공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5> 아세안과 EU의 소득격차 비교

	1986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6년		2010년	
	아세안	EU 15	아세안	EU 15	아세안	EU 15	아세안	EU 15	아세안	EU 15	아세안	EU 15
GAP I	85.3	2.8	108.1	2.8	106.4	2.7	67.4	3.0	40.1	3.4	29.7	3.4
GAP II	4.1	1.6	3.5	1.9	4.0	1.8	4.3	1.9	3.7	2.2	3.9	2.2
GAP III	16.6	2.0	16.1	1.9	30.9	1.9	29.2	1.9	23.2	2.0	18.1	2.0
GAP IV	1.9	1.3	1.9	1.3	2.6	1.3	2.9	1.4	2.8	1.5	2.7	1.5

자료: 박변순, 김경훈 2012: 81.

그 동안 경제성장의 결과 아세안의 선발회원국의 사회적 발전도

18) 아세안의 경제적 격차는 결국 아세안 선발 회원국과 아세안 후발 회원국, 즉 CLMV 국가와의 격차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루어져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아세안 후발 회원국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 중등학교 등록률은 2010년 아세안 선발 회원국의 경우 70% 이상이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50% 미만이다. 위생 및 보건상황도 개선되어 5살 미만에 사망하는 어린이도 대폭 감소했는데 2010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은 30인 이하이다. 기대수명에서도 2010년 싱가포르는 81세가 넘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70세 이상이지만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 60세 전반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의 신생아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15세 정도 차이가 난다.

<표 6> 아세안 및 주요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추이

	중등학교 등록률(%)		영아(0-5)사망(천명당)		기대수명(출생시)	
	1995	2010	1995	2010	1995	2010
캄보디아	19.9	46.2	118.5	51.0	55.8	62.5
인도네시아	48.0	75.1	66.6	35.3	64.4	68.9
라오스	25.6	44.7(09)	114.6	53.8	58.0	67.1
말레이시아	57.8	69.1(09)	13.4	6.3	71.4	74.0
미얀마	31.5	54.3	113.1	66.2	59.3	64.7
필리핀	77.0	84.8	44.6	29.4	67.6	68.5
싱가포르	n.a	n.a	5.3	2.6	76.4	81.6
태국	53.5	77.2	24.7	13.0	68.4	73.9
베트남	41.9	77.2(09)	44.3	23.3	69.4	74.8
한국	97.8	97.1	7.5	4.9	73.4	80.8
중국	50.9	80.1	44.9	18.4	69.6	73.3

자료: World Bank DB 자료 이용 작성

IV. 결론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나 내용은 추상적이고 실천력은 부족했다. 계획 추진 과정에서 회원국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회원국들은 합의된 프로그램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결국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긴 여정은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규모 개방국가들의 연합체로서 이들의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 모델을 고려할 때 역내에서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력의 진지함이나 적극성 여하를 떠나 EU와 같은 대규모 지역경제권과 같은 기준으로 경제공동체의 진전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의 가장 근본적 요소인 단일시장과 단일생산 기지는 부분적으로 달성했으나 통합 거버넌스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하다. AFTA를 통해 단일시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내 격차로 인해 진정한 경제공동체로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서 아직 비관세장벽 등이 존재하고 있고 경제적 격차 때문에 대외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관세동맹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전망이다.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의 이동면에서는 자본이동은 자유로우나, 노동이동은 불완전한 편이며 자본이동에서도 외환부족 문제가 있는 CLMV 국가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목표연도인 2015년에 아세안 경제공동체 달성을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향후 경제공동체를 달성하는 데는 몇 가지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첫째는 역내 개발격차 문제이다. 역내 수요의 창출, 용이한 공동정책의 시행을 위한 경제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저개발국의 발전은 주요 선결과제 중 하나이다. 후발 회원국의 성장으로 수입규모가 증가한다면 아세안 역내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공동정책의 추진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는 공동체에서 다국적기업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다. 아세안에 투자한 다국적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분절화에 의한 생산 공유를 통해 역내무역을 증진시켜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최종조립을 위해 역내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하게 되고 수출과 수입과정에서 무역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게 되는데, 특히 아세안 자체의 기업가에 의한 산업발전이 저조한 상황에서 아세안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아세안의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한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역내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와는 반대로,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 심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세안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로 공업화를 추진하고 기술과 자본을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는 실패하였다. 게다가 현재 다국적 기업이 아세안 현지에서의 R&D 활동이나 기술이전에는 소극적이고, 아세안 회원국의 자체 R&D 역량 역시 취약하다는 점은 아세안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정 단계 이상부터는 다국적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아세안의 경제공동체 달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 아세안 역내무역보다 아세안의 대중국 무역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의 교역은 다른 전자분야에 비해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역내 전자산업 분업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세안은 현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늘리는 반면, 컴퓨터 및 부품, 통신장비 등 조립제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분업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아세안 전자산업은 역(逆)다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세안의 중국에 대한 산업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매력 약화는 공동체 추진을 저

해하고 있다. 아세안이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지향하지만 중국과의 생산 공유가 심화되고 일부 조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45년 동안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적 협력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는 것은 향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6억 명의 인구, 중산층의 확대, 미얀마의 개방 등 대내적 변화들은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역시 아세안 공동체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내 회원국의 상호경쟁, 역내 경제력 격차, 취약한 기술역량 등은 공동체 추진에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에 비해 열악한 아세안의 조립산업, 아세안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충돌, 동북아 3국의 호혜 협력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아세안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주제어: 아세안, 아세안경제통합, 아세안 공동체,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아세안산업협력

<참고문헌>

- 권율 · 정인교 · 박인원. 2003.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완중. 2009.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분석: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9(3): 221-260.
- 박번순 · 김경훈. 2012.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01&pubkey=db20120906001>
- 박인원. 1998. “AFTA, Is it Sufficient for ASEAN’s Further Economic Growth?.” 『1998년도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 703-728.
- 양평섭. 1994.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원용걸. 1996.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재원. 1996.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지대의 역할.” 『비교경제연구』 4: 95-140.
- ADB. 2012. *ASEAN 2030: toward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DRAFT HIGHLIGHTS*. Manila: ADB.
- ASEAN. 1977. *Agreement On ASE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Manila, 24 February 1977.
- _____. 1981. *Basic Agreement On 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Manila, 18 June 1981.
- _____. 1983. *Basic Agreement On 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s*. Jakarta, 7 November 1983.
- _____. 1992.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Singapore Declaration of 1992* . Singapore, 28 January 1992.
- _____. 1996. *Basic Agreement On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 Singapore, 27 April 1996.
- _____. 2000. *Press Statement by Chairman, 4th ASEAN Informal Summit*. Singapore, 25 Nov 2000.
- _____. 2003.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Bali Concord II)*. Bali Indonesia. 7 Oct 2003.
- _____. 2005. *Approved AICO Applications as of 21 April 2005*.
- _____. 2007a. *Chairman's Statement of the 13th ASEAN Summit, "One ASEAN at the Heart of Dynamic Asia"* . Singapore, 20 November 2007
- _____. 2007b. *Forty Years of ASEAN: Can the European Union be a Model for Asia?*", *Talk by the Secretary General of ASEAN at the Konrad Adenauer Foundation Berlin*, 16 July 2007.
- _____. 2009a. *Roadmap for an ASEAN Community 2009-2015*. Jakarta: ASEAN Secretariat.
- _____. 2009b. *Chairman's Statement of the 15th ASEAN Summit- "Enhancing Connectivity, Empowering Peoples"* . Cha-Am Hua Hin, Thailand, 23-25 October 2009.
- _____. 2011a. *Bali Declaration on ASEAN Community in a Global Community of Nations "Bali Concord III"*, 17 November 2011.
- _____. 2011b. *ASEAN Investment Report 2011*. Jakarta: ASEAN Secretariat.
- _____. 2011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Jakarta: ASEAN Secretariat.
- _____. 2012. *ASEAN Community in Figures 2011*. Jakarta: ASEAN

Secretariat.

- Capannelli, Giovanni, Jong-Wha Lee, and Peter Petri. 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Manila: ADB.
- DeRosa, Dean A.. 1995.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ASEAN Example*. Research Report 103.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Hill, Hal and Jayant Menon. 2011. *ASEAN economic integration: features, fulfillments, failures and the future*. ADB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No.6. Manila: ADB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Doing Business 2013* . Washington: World Bank.

<데이터베이스>

ADB ARIC DB

ASEAN Secretariat Resources DB

World Bank DB

UNCTAD DB

(2012. 12. 31. 투고; 2013. 02. 18. 심사; 2013. 6. 11 게재확정)

<Abstract>

Evolution of ASEAN Economic Cooperation

PARK Bun Soon
(Hongik University)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ereafter ASEAN) was established in 1967 in order to manage the conflicts of member states and to collectively deal wit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order. Its main priority at the inception was political solidarity; but economic cooperation also became paramount since the mid 1970s. It is true that the efforts for economic integration within ASEAN evolved with time but the most definitive form that has emerged out of these is an 'ASEAN Community', promoted since 2000s. The ASEAN Community is made up of ASEAN Political Community,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rogress made in forming ASEAN Economic Community due to be completed by 2015. Rather than using specific indicators for its definitio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is defined to exist when 4 objectives in the ASEAN community blueprint are met: a 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 a highly competitive economic region; a region of 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a region fully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the achievements made to meet the first and the third objectives in order to

analyse the extent to which ASEAN has moved closer to creating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This study finds that both the level of intra-regional trade and integration have been falling since 2008 and thu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efforts to create a single market and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have been successful. For instance, the level of intra-regional direct investment has remained below 20%; the investment to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in ASEAN has remained scarce; and lastly the investmen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have concentrated on service industry rather than manufacturing industry. All of these confirm that the creation of a single market has a long way to go.

This study also looks at the changes of income per capita of member countri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national income at specific time intervals to find out whether or not there has been any significant progress made to reduce the development gap within ASEAN. It finds that,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the quality of life for advanced countries has improved dramatically whereas that of CLMV countries has still remained at low-level.

Key Words: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trade cooperation,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FTA

